

초등 '생존수영' 교육도 전면 중단

광주, 초등 2~6학년 1인당 10시간 실기→이론 대체 전남, 1~6학년 6만5500명 올스톱... 예산 33억 삭감 공공수영장 줄줄이 폐쇄...내년 현장실습도 "유동적"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국정과제로까지 채택된 초등학교 생존수영 교육이 코로나19로 올스톱됐다.

수영장 사용중지 등으로 현장실습이 어렵게 되면서 수업은 이론교육으로 대체됐고, 관련 예산은 삭감됐다. 백신 개발 등이 늦어지고 코로나19가 진정되지 않을 경우 내년 교육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1일 광주·전남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광주에서는 지난해 3~6학년에 이어 올해는 2~6학년 전체 3283학급 학생 7만3100명을 대상으로 광주체육교육수영장 등 광주지역 18개 수영장에서 생존수영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 동안 기초과정인 숨쉬기 호흡법을 비롯해 구명조끼 착용법, 구명조끼 입고 뛰기, 내리기, 생존뜨기, 부유물 이용 방법 등 생존에 도움이 되는 수영기술을 몸에 익힐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총

총합계 편성했다.

그러나 지난 1월20일 국내 첫 확진자(30대 중국 여성)와 1월24일 국내 첫 내국인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국내 누적 확진자가 2만 명을 돌파하는 등 코로나19 기세가 8개월째 꺾이지 않으면서 관련 교육은 모두 중단된 상태다.

예산도 당초 본예산에 24억원을 책정했으나, 최소 경비를 제외하고 21억8000만원을 최근 2차 추경에서 삭감했다. 사실상 전액 삭감인 셈이다.

내년에는 실기를 올해 계획의 절반 수준인 5시간으로 줄이고, 나머지 5시간은 이론교육으로 채울 계획이지만 이마저도 장담하기 힘든 실정이었다.

시교육청 체육보건교육팀 지혜란 장학관은 "백신이 연내 개발되거나 국내와 지역 확진자가 눈에 띄게 줄지 않는 한 생존수영 재개는 당분간 쉽지 않을 전망이다"이라고 말했다.

전남도 사정도 마찬가지다. 전체



초등생 9만2582명 가운데 참가 희망 학생 6만5532명을 대상으로 교육부 지침에 따라 10시간 이상 생존수영 실기교육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최근 백지화됐다.

3학년 전체, 4학년생 90% 이상 등 전체적으로 71%의 학생이 참여하기로 해 관련 예산 35억5000만원을 학생들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었으나, 교육 프로그램이 멈춰서면서 사실상 전액 삭감됐다.

강사비, 입장료, 식비 인상을 고려해 내년 교육대상 9만 명에 45억 원을 편성할 예정이었으나, 현재 상태라면 쉽지 않을 전망이다.

22개 시·군에 도 교육청이 보유한 교육용 수영장이 8곳에 불과해 농어

촌 도서벽지 학생들의 경우 1박2일 또는 2박3일 일정으로 배를 타고 육지로 나와 단체 체험학습에 생존수영을 끼워서 교육을 진행해야 하지만, 감염 우려에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전남도의회를 통과한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조례안'도 1년 만에 벽에 부딪힌 상태다.

도교육청 이병곤 장학사는 "생존수영에 대한 요구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 마당에 코로나19라는 복병을 만나 차질을 빚고 있다"며 "우선, 이론 위주로 진행하되 실습 재개는 코로나19 진행 상황을 보이며 신중히 결정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민정기자

광주 영구임대아파트서 5·18민주유공자 숨져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홀로 살던 5·18민주유공자가 숨졌다. 1일 광주시와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께 광산구 모 영구임대아파트 8층에 사는 A(60)씨가 1층 화단에 쓰러져 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5·18유공자인 A씨는 기초생활수급비로 혼자 살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5·18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에서도 활동하지 않았다.

경찰은 A씨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는 말을 남겼다는 지인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A씨는 1980년 5·18민주유공운동 당시 소요죄 혐의로 연행·구금돼 군사재판을 받았다. 심의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1993년 상이 등급을 받았다.

광주시는 5·18유공자 지원 조례에 따라 A씨의 장례 절차를 지원한다. 유족에게 국립 5·18민주묘지 안장 절차도 안내할 방침이다.

훤친자재 처분하려던 50대, 택시기사 '눈썰미'에 덜미

과거 일했던 가게에서 절도 행각을 벌인 50대가 훤친 자재를 고물상에 판매하려다, 이를 수상히 여긴 택시 기사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1일 영업을 끝난 상가에 들어가 금속 자재를 훤친 뒤 도주 중 이용한 택시 요금을 내지 않은 혐의(야간건조물점입절도·사기)로 A(5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7시50분께 광주 서구 한 에어컨 판매 대리점 뒷문을 열고 들어가 20만 원 상당의 실외기 설치 자재를 훤쳐 달아난 혐의다. 범행 직후 택시를 이용하면서 요금을 내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올해 초 직원으로 일하며 자재 창고와 연결되는 뒷문이 항상 열려있다는 점 등을 알고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훤친 자재를 팔아 현금화하기 위해 택시 1대를 타고 남구·동구 일대를 배회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택시를 타고 들른 고물상 3곳 모두 영업을 마친 뒤여서 장물을 처분하지 못했다.

그 사이 택시기사는 요금 지불을 미루며 목적지를 거듭 바꾸는 A씨의 행동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에 붙잡힌 A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저지른 일이다'며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누범기간에 절도 행각을 벌이는 등 재범 우려가 높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기아차 취업 돕겠다' 사기 행각 일당 1명 구속

기아자동차 취업 알선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받아 가로챈 일당 중 1명이 구속됐다.

광주경찰청은 기아자동차 정규직 취업을 빌미로 거액을 챙긴 혐의(사기)로 A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사기 행각에 가담한 피의자 중 일부를 입건했으며, 주범 격인 B씨를 쫓고 있다.

A씨 등은 구직자들을 상대로 '기아자동차 공장 협력업체 등에 취업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속여 거액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이들은 채용 과정에 관여할 수 있는 지위와 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기아자동차 정규직 취업을 도울 수 있다'고 지인들을 속인 뒤, 주범 격인 B씨에게 소개해준 것으로 전해졌다.

주범 격인 B씨는 교묘하게 관련 증빙 서류를 꾸며 피해자들을 속이며 거액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선 '650여 명이 취업 사기에 속아 총 154억 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와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학살 주범 '전두환 미화 시설물' 철거·교체 잇따라

5·18기념재단, 전두환 잔재 청산 운동 지속 추진



1일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지난달 인천시 흥륜사 정토원 현판의 전두환 휘호(2008년 개원식 때 기증)가 교체됐다. (사진 = 5·18기념재단 제공)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전국에서 전두환 미화 시설물 철

거 교체가 잇따르고 있다. 1일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지

난달 인천시 흥륜사 정토원 현판의 전두환 휘호(2008년 개원식 때 기증)가 교체됐다.

앞서 지난해 말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대전 현충원 전두환 현판·현시비, 전북 장수군 논개생가터 정자현판, 강원 인제군 백담사 화엄실 내 전두환 사용 물품이 철거·교체됐다.

옛 청남대에 설치된 전두환·노태우 찬양 또는 역사 왜곡 시설도 조레 개정을 통해 철거가 추진된다.

전두환 고향인 경남 함천군도 전두환의 아호를 붙인 일해공원의 명칭 변경을 검토 중이다. 함천군은 여론 조사를 거쳐 일해공원명 변경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두환의 행적을 기념하는 잔재도 곳곳에 남아 있다. ▲인천

시 인천상륙작전기념관 현충탑 앞 기념석판 ▲전남 장성군 삼두대 법당 전두환 범종 ▲국립중앙도서관 국민 독서교육의 전당 조형물 글씨 ▲국사편찬위원회 기념식수 ▲서울 중소기업중앙회 건물 앞 친필 글씨 등이다.

5·18재단은 해당 시설물이 전두환의 범죄 행위를 미화·찬양해 그릇된 역사 인식을 조래할 수 있다고 판단, 흔적 지우기에 주력할 방침이다.

5·18재단 관계자는 "광주학살 주범인 전두환을 찬양하는 건 국민의 희생 속에 일궈낸 민주주의 역사를 모독하는 것이다. 군부독재 흔적과 그릇된 과거사를 하루빨리 청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두환 미화 시설물 관련 제보는 5·18재단 고백과 증언센터(062-360-0552)로 하면 된다.

기동취재본부

서버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